

북한의 ‘공화국’ 이념과 현실, 그리고 카리스마 문제: 북한연구에 있어서 정치평론의 역할

김동규
명지대학교

I. 북한이슈와 정치평론

우리 정치에 있어서 ‘북한’ 이슈만큼 강력한 것이 있을까? 작년 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바다이야기라는 신종 오락기계가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고 있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니 다른 모든 이야기는 신문 1면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만큼 북한이슈는 강력하다.

하지만,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북한 이슈는 주로 ‘정보’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질 뿐이다. “북핵실험이 성공이냐 실패냐” “고영희 자서전이 발간되었으니, 김정철·김정운 두 아들 중 하나가 후계자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위원장을 실은 특별열차가 오늘 오전에 단동을 통과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했다”는 식의 기사가 주로 북한 이슈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이렇게 정보 획득 경쟁 위주가 되다보니 북한관련 평론들은 일단 흥미를 끌지 못한다. 어차피 북한관련 정보야 칼럼들이 실리는 오피니언 보다는 정치면에 실리게 되는데, 이들 기사들도 사실 기술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거나 약간의 추측과 전망을 가미한 ‘분석’ 기사 수준을 넘지는 못한다. 칼럼이라고 해봤자, 북한 민주화를 부르짖는 보수시각의 칼럼이거나 대북포용을 역설하는 진보시각의 칼럼일뿐, 새로운 계몽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관련 ‘정치평론’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북한이슈와 관련하여 정치평론은 어떤 기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 북한전문가가 아닌 정치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치평론가는 정보의 양(量)에 의존해 글을 쓰지는 않는다. 정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정치평론가는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짓는 이른바 ‘학제적’ 접근에 강하다. 따라서, 정치평론가는 정치철학, 경제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 학문의 경계를 넘어 북한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들을 서로 연결지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슈에 대해 정치철학이나 다른 학문분야는 해 줄 이야기가 지금보다 많다.

이른바 북한 전공자가 북한이슈를 독점하는 현상은 북한이슈를 빙곤하게 만들 뿐이다. 물론, 정치철학의 경우, 스스로 한국학계의 구획주의(區劃主義)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는다. 자신의 학문적 훈련이 정치철학 이전 비교정치학이건 또는 경제학이건 이러한 구획주의를 넘는 것이 정치평론을 하는데 있어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문가주의가 정치평론을 막고 있다.

Ⅱ. 왜 ‘레짐’인가?

북한과 관련하여, 레짐이라는 단어는 주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는 표현에서 사용된다. 이른바 신보수주의 즉 네오콘(neo-con)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로 이해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제거하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어왔다. 물론, 이 표현에 김 위원장 제거라는 뜻이 살짝 묻어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표현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제거, 이라크의 후세인 바트사회주의당 정권의 제거로 이어지면서 실제 네오콘의 목표가 김 위원장 정권의 제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오콘의 지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입장에서 ‘레짐’이라는 것은 단지 ‘정권’ 수준의 실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¹⁾ 그것은 고전 정치학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치체제’ ‘정체’의 문제의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레오 스트라우스는 ‘좋은 정치체제는 주변국가들과 잘 지내야 하고 또한 좋은 내부 메카니즘을 가짐으로써 오래 영속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레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오해를 의식해서인지, 한때 미국측에서는 ‘레짐 트랜스포메이션(regime

1)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해서는, Leo Strauss, *Natural Rights and Histor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와 *What is Political Philosoph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참고하시오. 필자의 서울대석 사학위 논문 「Leo Strauss의 Carl Schmitt 비판」pp.66-67에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근대 정치철학은 ‘사회계약 즉 합의가 어떻게 성립되는가’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회계약 즉 합의의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고대정치철학은 국가의 성립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용 즉 체제(regime)에도 관심을 쏟는다. (중략) 국가의 성립은 단시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회계약의 내용을 가장 홀륭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대 정치철학의 목표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성립은 ‘지금 당장’과 관련되지만, 이 국가의 존속은 ‘지금 당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속을 위해서는 전체(the whole)와 영원성(eternity) 안에서 국가는 가장 홀륭한 체제를 가지고, 가장 홀륭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언론 등에서는 '정체변경' '정체변형' '정치체제 변화'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레짐 체인지' 와 같은 뜻이다.

그럼, 왜 '레짐'을 이야기하는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를 따르는 미국 공화당 계열은 헨리 키신저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다른 식으로 하자면, 열정이나 이상을 제거하면서 냉정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자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이다. A라는 나라가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면, 이 국가에 맞서는 B라는 나라는 타국과의 동맹이나 자체적 군비확장을 통해 '힘의 균형'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물리학적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이 정치현실주의, 즉 전통적인 보수주의 국제 정치 철학이다. 따라서 A라는 나라가 어떤 내부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당구공 내부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동일한 무게와 경도만을 갖추면 된다. 당구공을 멈추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당구공의 힘일 뿐이다.

하지만, 내부 메카니즘이 밖의 세계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당구공과 달리 국가의 내부 메카니즘은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힘이 약한 A 나라가 무모하게도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미국에 대해 도발하였다. 세력균형이라는 물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동네에서 말썽을 일삼는 건달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건달이 힘의 균형을 고려해 싸움을 걸기도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는가? 건달은 그 성격(nature, physis)을 고치지 않는 한 계속 건달일 뿐이다. 동네에서 그를 아무리 제어해도 그는 계속 나쁜 짓을 일삼는다. 세력균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바로 국내정치체제의 다양한 양태에 따라 국제질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한 나라의 국민 100%가 합의해 사회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문제가 있어 주변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이 나라 내정에 개입해 미연에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이 국제정치 부문에 던진 메시지이다. 이러한 '내정개입' 메시지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단순화하고 과격화한 써클이 바로 '네오콘'이다. 물론 네오콘 운동 뒤에는 석유로비, 군수로비, 또 얼마 전 미국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로비'²⁾가 웅크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문제는 미국 등 관련국가들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여 현재의 북핵문제의 급한 불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

2) John Mearsheimer & Stephen Walt, "The Israel Lobby", *London Review of Books*, March 23, 2006 참고.

단 불을 끄더라도 북한의 레짐이 현재와 같다면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향해 갖가지 도발을 해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³⁾ 사실관계의 일부는 우리 공안당국에서 과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북한은 보통국가라면 못할 도발을 계속해서 일삼는 국가이다. 벼마 아웅산묘소에서 남한의 각료들을 폭사시키고,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폭파했다. 더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면 남한의 대통령궁을 향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휴전선에서 나무 한 그루를 놓고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하기도 했다. 남한의 유명 여배우와 그 남편인 영화감독을 납치하고, 일본인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씩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북한이다. 이러한 레짐을 가진 북한이 또 새로운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없겠는가라는 것이 미국 네오콘의 질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체제변경' '체제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그리면, 북한 체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필자는 고대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참주정(僭主政: tyranny)' 문제와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지는 구조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북한이라는 국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건실한 일원이 되도록 돋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안보우려'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있어 내세우고 있는 정당화논리가 바로 '안보우려'인데, 필자가 보기엔 이 '안보우려'의 50%는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며, 나머지 50%는 그들 체제의 독특한 성격에서 나오는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虛構)이다.

따라서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교섭을 할 때 북한이 가지는 현실에 근거한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등 당사국들이 그것의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허구의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레짐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체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미국 등 관련당사국들은 협조를 제공할 수는 있다.

3) 북한이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는 재래식 군비상의 열위(劣位)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Michael O' Hanlon et al,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New York: McGrawHill, 2003)도 한반도 상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유익한 저작임.

Ⅲ. 북한과 참주정(tyranny)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비난하면서 쓰는 표현이 여럿이 있는데, 부시행정부 초기인 2002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에 대해 사용했던 표현이 '악의 축(axis of evil)'이었고,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오면서 쿠바, 미얀마, 짐바브웨, 벨로루시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다.

여기서 '폭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tyranny'인데, 필자 역시 북한을 'tyranny'라고 규정하고자 하지만 '폭정'이라는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합법화되지 않은 일인통치체제'로 개념 규정되는 '참주정'이라는 의미에서다. 참주정은 무조건 나쁘고 포악한 체제는 아니고 운영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므로 포악해질 가능성은 높다.

참주정은 왕정과 다른 것인데, 참주정은 왕정이 아닌 정치체제에서 한명에게 왕과 같은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합법성이 결여된 일인통치라 할 수 있다. 반면, 왕정은 기본적인 국가계약에 의해 왕위계승자는 선왕의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이 새로운 왕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법에 의해 인정받게 된다. 물론, 무능하고 무도한 왕(king)이 자의적으로 그 나라의 근본적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폭군(despot)'으로 낙인찍히면서 반정(反正)을 맞아 몰락할 수도 있다.

참주 역시 근본적 계약을 위반한 점에서는 '폭군(despot)'과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주는 개인적 비범한(extraordinary) 능력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지지나 또는 소극적 방관 속에서 권력을 개인에 집중시킨 경우다.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공화국이다. 즉, 일인통치체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실상은 북한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 동상들이 보여주듯이 권력이 김일성 일가에 집중되어왔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행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김위원장에 얼마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반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잘 알 수 있다. 당시, 김위원장은 말없이 무표정한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그 특유의 활달함과 다변(多辯)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배석해 있던 김용순 비서에게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다변과 함께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이 너무 빠르고 또한 문법적으로 헝클어져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만든 헌법과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도 오랫동안 각료와 비서진과 함께 작성해둔 '말씀자료'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아주 적은 말을 했다. 하지만, 견제할 세력이 별로 없는 김 위원장은 다변이었다. 또, 지시를 받기보다는 내리는데 익숙해서인지 발음도 불분명했고, 문법도 헝클어져있었다.

공화국에서 '일인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크세노폰의 『참주 히에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잘 나타난다.⁴⁾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인 통치를 하는데 대해 동의해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파묻혀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노심초사는 그가 군대의 이동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인 그는 연대급 부대의 이동까지도 결재하려 할 만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존경은 그의 장례식 기간 중 보여준 북한 주민들의 애도가 보여주듯 대단하다. 선전에 의해 확대, 과장된 점이 있지만, 북한주민들에 있어서 그는 '보천보 전투'를 지휘한 항일투사이고, 한국전쟁 중 세계 최강인 '미제(美帝)'를 물리친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일으켜세운 영도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비범함을 뜻하는 '카리스마'는 전쟁에서의 위업이나 제사장의 마법이나 기적, 또는 위대한 예언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그가 대학시절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영화미학과 같은 부분에서 위대한 철학적 업적을 남겼다는 식의 정치선전이 있긴 하다.⁵⁾ 하지만, 언제

4) 참주인 히에론이 이야기하는 몇가지 고통을 살펴보자: "참주는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전쟁을 평생토록 치르는 것이오" "내 동료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소" "참주는 앞에만 적을 둔게 아니라 사방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오" "참주는 지체높고 혼명하며, 정의로운 사람들과 친하지만 사실 그들을 두려워한다오. 용감한 자는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몰라 두려워하며, 정의로운 자는 군중이 그를 따를까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남몰래 제거하여 한다면 참주의 결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남게 되지 않겠소?(중략) 이 고통은 모진 것이오. 생각같아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쓰고 싶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오." Xenophon, "Hiery or Tyrannicus", in Leo Strauss, On Tyrann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00) 국역은 이동수 역, 크세노폰 지음, 『키루스의 교육』의 부록 "히에론 (또는 티라니쿠스)" 참고.

5) 북한 선전기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1994년 골프 첫 라운딩에서 34언더파라는 경의적인 실력을 보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김 위원장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가 정일봉 꼭대기 216m 아래에서 2월 16일에 태어났다면서 216이 서로 겹치는 것은 비범한 일이라고 선전하기도 한다. 이렇게해서라도 카리스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까지 이러한 식으로 그의 카리스마를 떠받들고 있을 순 없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부친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유훈통치'다. 이렇게 해서라도 카리스마가 유지되지 않으면, 참주정은 다시 원래의 정치형태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후 전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그의 카리스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이른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간'인데, 이 기간 중 최소한 수십만의 주민들이 사망했다. 일부에서는 최대 300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른 김 위원장으로서는 카리스마의 보호를 위해, 즉 '참주정'의 유지를 위해 '경제부문은 나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는 최고통치권자로서 주석, 수상과 같은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직책을 피하고 국방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국방위원장' 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내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을 막고 있는 와중에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에게 맡겨두었더니만 경제를 이 꿀로 만들어놓았다'는식의 비판을 훌리고 있다. 그는 향후 경제에서 카리스마를 뒷받침해 줄 정도의 업적이 나오게 되면 '국방위원장' 직을 벗어던지고 수상 등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북한이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부장'을 '상(相)'으로 명칭을 변경(예컨대, 외교부장→외무상)한 것도 자신이 수상에 취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는 '내가 경제를 쟁기니 경제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식의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후 그 경제적 업적의 크기에 따라 북한의 참주정은 안정되거나 불안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카리스마는 '군사 카리스마'이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맞서고 있고, 또 소수로 구성된 핵보유국 클럽에 들도록 이끈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고 그의 '당당한' 외교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세상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해온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북미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국제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또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 참주정을 지켜보겠다는 국내정치적 고려도 있다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참주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를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려 한다면 그는 끊임없이 '위대한 업적'을 추구하면서 카리스마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카리스마를 더 이상 군사부문에서가 아니라 경제와 같은 부문에서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박정희'식 카리스마, 박정희식 참주정 문제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작년 주중북한대사관 관리를 통해 밝혔듯이 박근혜 한 나라당 전 대표를 초청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초청해 만나기도 했다. 북한의 고위관리들 역시 박정희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

외적으로 도발해야 하는 위험 없이 일인통치를 유지하는 방도 즉 경제적 카리스마를 통한 참주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 보다 박정희 모델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차기 정치 리더십을 중국-베트남식의 집단지도체제보다는 자신의 일인통치체제 형태로 구성할 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V. 북한과 중화학공업⁶⁾

사회주의 경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제논쟁이 있는데, 경제발전을 경공업과 중공업 중 어느 것이 이끌어야 하는가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소유양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문제도 있다. 중화학공업을 통해 자본재를 생산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 속도를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재와 소비재의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과는 별도로 사회주의 체제, 정확히 역사속에서 실재했던 사회주의체제는 중화학공업과 태생적으로 '친화성'이 있다. 잘 맞는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쓰는 표현중에 '자유주의 하다'라는 말이 있다. 즉, 조직논리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의 통제권이 중앙으로 넘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권력도 넘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 중앙으로 기울면서 중앙권력은 주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경공업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경공업은 사업단위가 소규모이고 흩어져있다. 반면, 중화학공업은 대규모 단위의 사업장에서 감시 하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이 집중된 중앙정부와 당은 중화학공업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논쟁에서 중공업 논자들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게 된다. 경공업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하는' 분위기와 친화력이 있다. 물론,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노동이 강제되질 않는 농업 역시 '자유주의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다. 그래서, 소농을 철폐하고 집단농

6)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 저작들을 주로 이용했음. 알렉 노브, 『소련경제사』(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2).

장 전립을 강행하는 와중에서 소련과 중국의 농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농업에 중공업 방식을 적용하면서 생산량이 급전직하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일심(一心)' 아래 권력을 집중시킨 현 정치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화학공업 중심체제를 포기하고 경공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위험스러울 수 있다. 경공업은 그만큼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경제의 개방개혁에 따라 경제의 중심이 일부 경공업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될 '이완(弛緩)'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또, 북한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북한이 중국 보다 공업화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비해 농업중심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업부문에서 개혁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 더 많은 노동자의 공급을 원하는 경우, 농업부문에서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기존의 국유·공유 기업들을 온존시킨 채 사영기업을 추가 허용했을 때, 사영기업의 성장에 따른 노동자수급이 농업부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기존 국공유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소유제가 개혁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잉여노동력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잉여노동력이 새로 성장하고 있는 사영기업부문에 투입될 수 있었다.⁸⁾

반면, 공업화 정도가 높은 북한의 경우, 중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증량개혁' (增量改革)⁹⁾을 통해 국공유기업과 사영기업을 병존시켜 서로 경쟁시키는 경우, 농업부문에서 소유권개혁을 통해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성장하는 사영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농업부문이 아니라 주로 국공유기업 부문으로부터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에서의 경제개혁, 즉 사영기업의 성장은 기존 국공유기업부문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소련이나 동유럽식 공업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사회적 동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도부가 이에 대해 유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중시하는 이유로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중공업은 군수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박정희 유신체제와의 관련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중국 소유제개혁 과정은 정재호 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서울: 까치, 2002) 중 서석홍,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참고.

9) 기존 국공유기업에는 손대지 않고 새로운 사영기업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 수를 늘린다'는 의미의 증량개혁이고, 나중에 시행하듯이 기존 국공유기업 자체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 '기업 수는 늘리지 않고 기존의 것을 개혁한다'는 의미의 '존량개혁'이다.

V. 레짐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

먼저, 북한의 참주정 체제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을 생각해보자. 일부 보수적인 논객들은 평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하고 정치체제의 급변을 희망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걸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급변 자체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그 이후 나타나는 정권이나 정치체제가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유리한 형태를 떨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 현재의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 역시 원하는 것이지만, 남한과 관련당사국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카리스마가 너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⁰⁾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가급적 박정희 모델에서처럼 경제부문으로 그 원천을 이전하도록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측에 유리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수출에 주력하는 정권이 군사적 도발을 일삼을 것 같진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경우 당장 북한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고 경제성장이 어려워 질 것이다.

다행이도 핵실험 이후 군사적 카리스마를 어느 정도 확립한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있게 경제성장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조짐을 보였고, 그 결과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은 2.13합의에 도달했다.¹¹⁾ 아이러니하게도 핵실험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즉, 핵실험이 김정일 참주정을 안정된 기반위에 옮겨놓고 이러한 반침위에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있게 경제무문에서 새로운 카리스마의 원천을 찾으려하는 것이다. 카리스마는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와해되는 특성을 갖는데, 그래서, 합법화되지 않은 일인통치자인 참주는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다. 과거 한두 번의 기적만으로는 오늘을 생존할 수 없다. 오늘도 크고 작은 기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참주의 근본적 불행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외교협상을 할때도 이른바 '체제'라 불리는 김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face-saving)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측은 김 위원장의 체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옵션도 택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체제'이기 때문이고 이 체제는 그의 '체면' '카리스마'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11) 2006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는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문건을 입수하였는데, 이 문건은 이제 핵을 보유했으니 미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간부용 교육자료이다.

록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비해 공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영 기업의 성장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이 흡수력이 큰 농업에 의해 일정정도 이상 흡수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아마도 기존 국유기업 부문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력 공급이 그러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의 군축에 의해 약 110만명의 북한군 일부 병사를 경제부문으로 돌려 충격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충격을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의 경우, 중국에서 말하는 존량개혁(存量改革)과 같은 과감한 개혁이 초기부터 이뤄져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달리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격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며, 관련 당사국들은 여러 방식으로 북한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거대한 농업부문에서 생산력 증가가 나타나면서 농업부문이 새로 성장하고 있는 사영기업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들을 소비해줌으로써 노동력 공급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역할까지 맡아주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농업부문이 중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출에 더욱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초기에 남한시장이 북한 생산품을 소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VII. '레짐 문제설정(regime problematic)'과 정치평론의 역할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정치평론을 시도해보았다. 북한이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이른바 북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문헌을 연구해온 북한전문가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철학 전공자들이나 비교정치 전공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나 문화, 사회, 고전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되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겠지만, 사실 북한과 비슷한 체제는 소련과 중국과 같은 구 공산국가들이 있었고,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양태의 정치체제는 존재해왔다. 따라서, 정치평론가들은 기존의 북한전문가들이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지적해 줌으로써 북한연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문제와 경제 문제이다. 그런데, 정치평론이 이렇게 중요한 두 개 이슈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 북한에 대한 논의를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더욱 철학적인 수준으로 올릴 책임이 정치평론가들에게 있는 것이다. 최소한 단순화된 형태로나마 미국의 네오콘들은 '레짐' 즉 '정치체제' 와 같은 고전철학의 문제를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전적인 정치철학과 북한연구가 만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두 부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제 정치평론의 뜻이다.

〈참 고 문 헌〉

북한의 정치이념 및 레짐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을 소개 한다. 일부 문헌은 필자가 2007년 학기 명지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북한의 공화국 이념과 현실"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한 문헌으로,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포함시킨다.

1. 레오 스트라우스의 레짐 사상

Leo Strauss, "Introduction",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edited by Leo Strauss & Josph Cropse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Leo Strauss, *On Tyran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Leo Straus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레오 스트라우스의 '레짐' 사상은 신보수주의(네오콘)에 의해 도그마로 변질되는데, 이러한 네오콘 도그마를 일별하기 위해서는 Anne Norton, *Leo Strauss and the Politics of American Empi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를 참고하되, 이 저작이 신보수주의 뿐만 아니라 스트라우스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비판적인 점은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이다.

2. 주체사상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념체계인데, 주관주의·주의주의(主意主義: voluntarism)가 특징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철학과의 유사성¹²⁾이 주목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체사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이며, 주체사상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황장엽 전 비서의 국내출간 저작들도 중요하다. cf. 황장엽, 『세계관』(서울: 시대정신, 2003). 루카치 철학의 이해를 위해

12) 주체사상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황장엽 전 비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루카치"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한다.

서는 Georg Luka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Cambridge: MIT Press, 1972) 참고. 루카치 철학이 정치권력을 집중시킨 스탈린주의와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2)도 도움이 된다.

3. 북한의 '공화국' 이념

북한이 '공화국' 이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통한 간접 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는 급진 공화주의 운동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급진 공화주의는 이른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로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이해를 위해서는 플라톤의 『국가』, 플루타르코스의 『열전』 중 「뤼쿠르고스」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중요하다.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전 주석을 만났던 독일의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는 북한방문기 『또 하나의 조국』에서 북한을 시종일관 플루타르코스 「뤼쿠르고스」전과 비교하기도 했다.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적 고대 공화국의 이념이 상공업 위주의 근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의 이해를 위해서는 Georg Lukacs, *The Young Hegel* (Cambridge: MIT Press, 1976)를 추천한다. 북한 김일성대 철학과를 중심으로 플라톤 사상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바,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플라톤 『국가』의 공유제 사상의 문제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학』 제2권에서 잘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4. 북한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일반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단행본들이 도움이 된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Aec Nove,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New York: Penguin, 1993)
 정재호 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서울: 까치, 2002)